

특사경 역량강화로 자치경찰 도입 기반조성

# 주요 업무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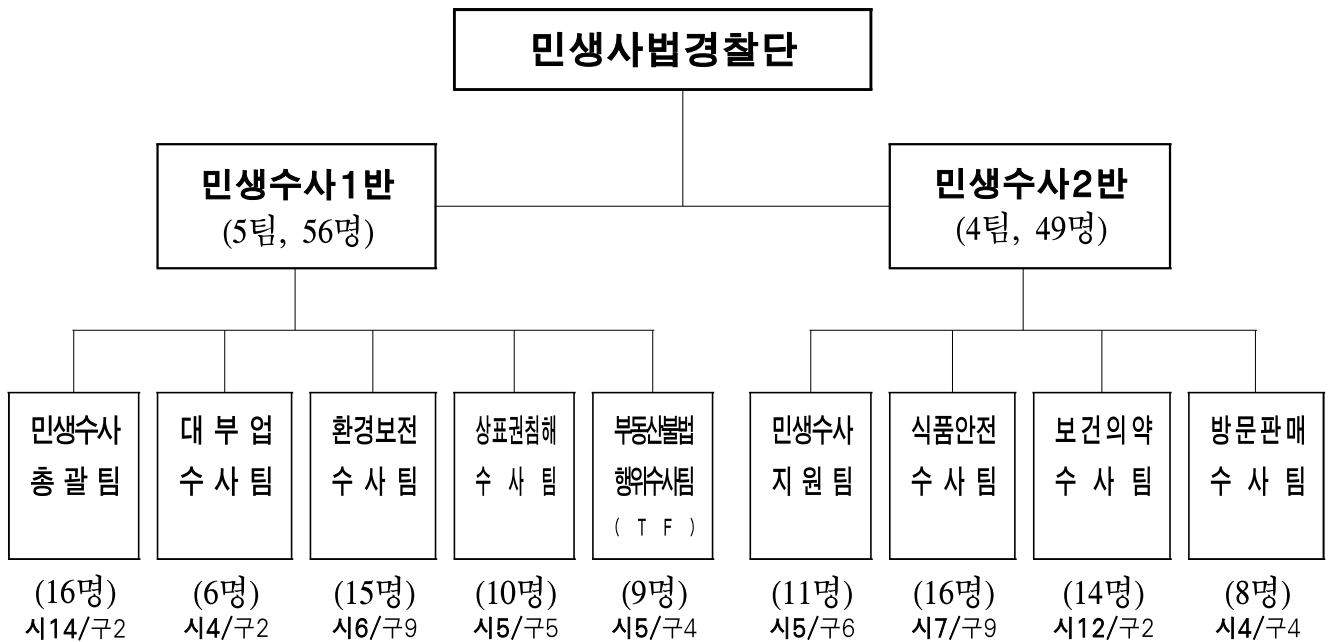
2018. 2.

민생사법경찰단

# I. 일반 현황

## 가. 조직·인력·예산 현황 ('18.1.31. 현재)

□ 조직 : 1단 2반 9팀



※ 부동산불법행위수사팀(TF팀) : '18.1.18.

□ 인력 : 105명 (시 62명, 자치구 43명)

(단위 : 명)

구분	합계	직급별 인원현황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계 (시+자치구)	105	1	2	10	49	36	7	-
시	소계	62	1	2	10	28	19	2
	수사1반	34	1	1	4	15	11	2
	수사2반	28	-	1	6	13	8	-
자치구	소계	43	-	-	21	17	5	-
	수사1반	22	-	-	10	8	4	-
	수사2반	21	-	-	11	9	1	-

□ 2018년 예산 : 1,63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7년		증감 (A-B)	%
	예산액(A)	예산액(B)	집행액		
<b>총 계</b>	<b>1,637</b>	<b>1,594</b>	<b>1,507</b>	<b>94.5</b>	<b>43</b> <b>2.7</b>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62	62	56	90.3	-
사무관리비	38	38	38	100	-
국외업무여비	15	15	9	6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	9	9	100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90	1,118	1,074	96.1	7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	6	6	100	-
사무관리비	410	388	388	100	22
공공운영비	72	66	66	100	6
국내여비	378	333	309	92.8	4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	19	19	100	2
특정업무경비	276	288	269	93.4	△12
재료비	15	12	11	91.7	3
배상금등	2	1	1	100	1
자산및물품취득비	9	5	5	100	4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249	229	205	89.5	20
사무관리비	1	-	-	-	1
공공운영비	25	-	-	-	25
전산개발비	223	-	-	-	223
자산및물품취득비	-	229	205	89.5	△229
기 본 경 비	136	185	173	93.5	△49
사무관리비	105	96	96	100	8
국내여비	16	80	68	85	△6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	-	-	-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	9	9	100	1

□ 수사반별 업무분야

반 명	팀 명	담당 업무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총괄팀	▶ 인사, 조직, 예산, 직무교육, 송치 등 특사경 업무총괄 - 단속·수사 종합계획 수립, 홍보, 제도개선, 사건송치 등
	대부업수사팀	▶ 불법 대부업 분야 수사 - 불법 대부업 분야 기획·인지 수사 등
	환경보전수사팀	▶ 환경 분야 수사 -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사, 가짜 석유제품 불법유통 수사 등
	상표권침해수사팀	▶ 상표권 침해 행위 수사 - 상표·상호 도용,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수사 등
민생수사2반	부동산불법행위수사팀(TF)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수사 등
	민생수사지원팀	▶ 청소년보호분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수사 - 청소년 유해 매체물·유해 약물, 개발제한구역보호, 긴급안전점검 기피·방해행위 수사 등
	식품안전수사팀	▶ 식품·원산지표시 분야 수사 - 식품 제조·가공·유통과정 위반,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
	보건약수사팀	▶ 공중위생·의약·화장품·의료기기·의료·정신 분야 수사 - 위생업소 불법행위, 불법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제조·판매사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 관련 개인정보 누설행위,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 관련 수사 등
방문판매수사팀	▶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및 할부거래, 사회복지시설 분야 수사 - 불법 다단계판매,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수사 등	

# 나. '17년 수사실적 : 1,423건, 1,684명 입건

(17. 12. 31. 현재)

구분	입건			수사 진행중		검찰 송치										기소율 (A/(A+B))
						계		기소		불기소		이송 등 기타		검찰 처분중		
	건	%	명	건	명	건	명	건	명(A)	건	명(B)	건	명	건	명	
합 계	1,423	100	1,684	175	207	1,248 (4)	1,477 (4)	836 (3)	964 (3)	37	66	15	20	360 (1)	427 (1)	94
식품위생	620	44	649	92	94	528	555	333	351	18	21	5	6	172	177	94
원산지표시	33	2	37	6	6	27	31	13	16	4	4	-	-	10	11	80
의 약	26	2	39	16	22	10 (1)	17 (1)	8 (1)	13 (1)	1	2	-	-	1	2	87
공중위생	83	6	98	5	5	78	93	65	78	-	-	-	-	13	15	100
환 경	125	9	218	15	22	110	196	79	120	4	25	1	2	26	49	83
청소년보호	3	0	3	-	-	3	3	2	2	-	-	-	-	1	1	100
상 표	204	14	205	9	9	195	196	162	162	2	2	3	3	28	29	99
개발제한구역	46	3	46	5	5	41	41	22	22	2	2	-	-	17	17	92
화 장 품	7	0	12	3	5	4	7	3	5	-	-	-	-	1	2	100
의료기기	72	5	110	3	4	69	106	45	72	2	2	-	-	22	32	97
석유및자동차	131	9	137	12	13	119 (1)	124 (1)	88 (1)	92 (1)	2	2	3	3	26	27	98
대부및방문	73	5	130	9	22	64 (2)	108 (2)	16 (1)	31 (1)	2	6	3	6	43 (1)	65 (1)	84

※ ( ): 구속기소 / 이송 등 기타(타관이송, 고발취하, 기소중지 등)

## 다. 세부 직무 범위 : 16개 분야, 71개 법률

지명분야	직무내용	직무관련 법률
대 부 업 및 방 문 판 매	▶대부업·방문판매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사업 육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화 장 품	▶안전한 화장품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화장품법
의 료 기 기	▶안전한 의료기기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의료기기법
석유 및 자동차	▶시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 (가짜석유 유통, 무등록 석유판매, 무등록 불법정비 등)	○ 자동차관리법(무등록 자동차정비업 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식 품 위 생	▶부정식품 추방으로 시민체감 먹거리 안전 확보 (식품생산→제조→유통 등 위해여부, 위생관리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 (수입식품 미신고 행위, 고의로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 발급행위 등)	○ 식품위생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범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18.1.18. 신규 지명) ○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18.1.18. 신규 지명)
원 산 지 표시	▶식품·농수산물, 공산품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 해소 (농·수산물·공산품 원산지허위표시, 인삼·양곡 불법판매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양곡관리법 ○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공 중 위 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 (공중위생업소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위생상태 등)	○ 공중위생관리법
의 약	▶가짜 의약품 등으로부터 시민건강 확보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 불법유통 등)	○ 약사법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 범죄)
환 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맑은 환경 보전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보전위반행위, 오염도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등)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하수도법 ○ 폐기물관리법 등 32개 법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18.1.18. 신규 지명)
청 소 년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탈선예방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유해업소출입·고용위반 등)	○ 청소년 보호법
개 발 제 한 구 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생활공간 조성 (무허가 건축, 공작물 설치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표 권 침 해 및 부 정 경 쟁 행 위	▶위조상품 제조·판매 근절로 상품신뢰도 제고 (상표·상호 도용 등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 등)	○ 상표법 ○ 대외무역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의 료 정 신 건 강 시 설	▶의료법 위반행위 근절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 거부행위, 의료기관 시설 위생 기준 위반, 개인정보 누설행위 수사 등)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 (강제 입원행위, 시설 이용자 가혹행위 수사 등)	○ 의료법(*18.1.18. 신규 지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8.1.18. 신규 지명)
사 회 복 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련 수사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기본재산에 대한 무허가 매매 행위 수사 등)	○ 사회복지사업법(*18.1.18. 신규 지명)
시 설 물 안 전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통한 재해와 재난 예방 (간급안전점검 거부 또는 기피·방해행위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8.1.18. 신규 지명)
부 동 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뺏다방 단속 등)	○ 주택법(*18.1.18. 신규 지명) ○ 공인중개사법(*18.1.18. 신규 지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8.1.18. 신규 지명)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17.12.19.)으로 4개 분야 16개 법률 추가 신규 지명

## II. 진단·분석 및 성과 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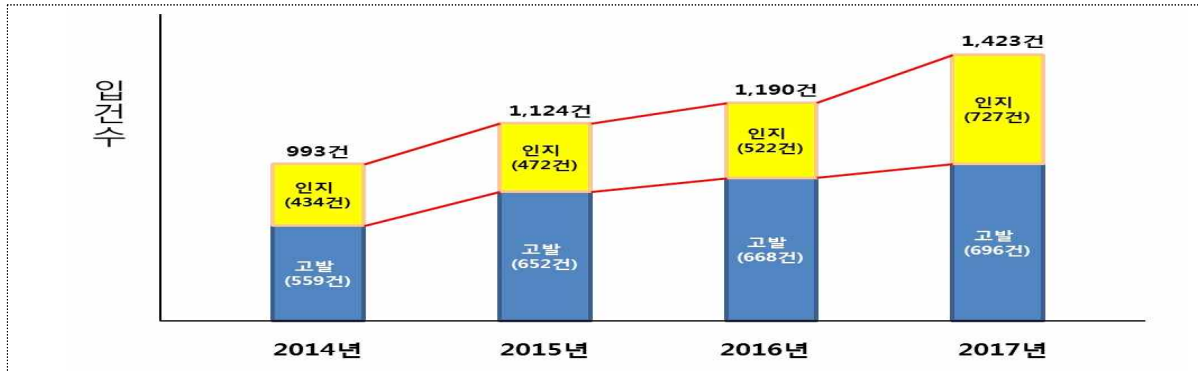
1. 민선6기 성과에 대한 진단·분석

2. 2018년 성과 목표

# 1. 민선6기 성과에 대한 진단·분석

## □ 수사전문성 확충으로 민생안정에 기여

- 인지 및 기획수사 획기적 증가 : '16년(522건) 대비 '17년(727건) 39% 증  
- 형사입건 : '14(993건) → '15(1,124건) → '16(1,190건) → '17(1,423건)



- 불법대부, 다단계 분야 서민생계 침해사범 수사집중 (최근 2년 121건, 구속3명)

## □ 특사경 전담수사기관에 걸맞은 전문수사 기반 조성

- 전국 지자체 최초, 특별사법경찰 '국' 단위 조직체계 확립('16.2.4)
-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로 수사권 강화 : 8개 ⇒ 12개

- 기존(8) : 식품, 공중위생, 의약품, 환경, 청소년, 원산지, 개발제한, 상표
- 추가(4) : **대부업·다단계판매**, 의료기기, 화장품, 석유·자동차('15.8월)
- ※ '17.12.19 : 공인증개사법, 주택법, 의료법 등 수사범위 추가

- 각종 '수사전산시스템' 도입 등 과학수사기법의 활용

- (경찰)범죄경력 조회시스템·수사자료표 전산시스템, (검찰)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소('17.8월)

- 성매매업자-수요자 간 통화불능 유도프로그램 '**대포킬러**' 개발

- 획기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주요 언론 메인 보도(총68회), 검·경, 금융감독원 등 벤치마킹

- 민생범죄 신고 앱 구축, 포상금제도 운영 등 시민제보시스템 마련

##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선제적 대응 추진

- 포럼, 자문단(자치경찰시민회의) 운영, 학술용역('18.2.6. 발표) 추진 등

## 2. 2018년 성과 목표

비전

민생범죄 척결로 안전도시 서울 구현

목표

특사경 창설 10년! 자치경찰 기틀 확립

정책기초

전문  
경찰

+

민생  
경찰

+

소통  
경찰

+

인권  
경찰

### 수사 전문가 양성 및 과학수사기반 마련으로 수사역량 강화

- 전문관 확대, 검·경 유사분야 경력직 채용(3명), 장기근무(3년) 시행 등
- AI활용 수사 정보체계 구축, 수사자료 전산화 추진
- 검·경 수사시스템, 디지털포렌식센터, ‘대포킬러’ 등 적극 활용

▶ 범죄경력 조회시스템 ▶ 수사자료표 전산시스템 ▶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 민생침해 수사범위 확대·활성화로 민생범죄 척결

- (기존) 불법 대부업·다단계 등 12개 분야(55개 법률)
- (신규) ‘주택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4개 분야 16개 법률 추가

### 수사거버넌스 확대 및 민생범죄 신고제도 활성화

- 서울YWCA 등 시민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협약 추진
- 시·구 협업체계 구축, 자치구별 민생수사전담팀 신설 권고
- 민생범죄 신고 앱, 포상금 제도 지하철광고, 자치구 소식지 게재 등

###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인권 특사경상 정립

- 인권침해 발생 사전예방, 사후구제, 인권보호시스템 제도화
- 인권존중 수사 환경 구축 및 인권의식 함양



## III. 핵심 사업

---

1. 수사역량 및 전문성 제고로 시민안전 강화
2. 디지털 수사기반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강화
3. 수사 거버넌스 확대로 민생범죄 사전예방
4. 인권침해 없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상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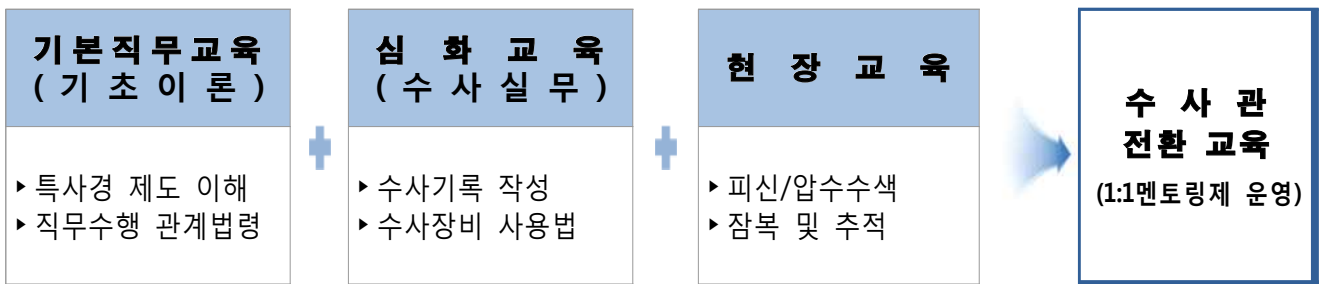
# 1

## 수사역량 및 전문성 제고로 시민안전 강화

- ◆ 수사교육 강화 및 수사전문 인력양성으로 수사역량 제고
- ◆ 특사경법 개정에 따른 추가 16개 민생법률의 차질 없는 수사 진행

### □ 맞춤형·체계적 수사교육을 통한 수사전문성 확보

- 신규 전입 수사관 : 주입식 이론교육 ⇨ 현장중심 실무교육



- 기존 수사관 → 상시학습체계 운영으로 분야별 수사 전문가 양성

전 문 기 관 교 육 훈 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연수원(일반/타겟과정), 경찰연수원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연중)</li> <li>▶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요원 양성과정 파견 등 전문교육('18.하)</li> </ul>
수 사 분 야 별 외부전문가 초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업 관계자 등 전문가 초빙교육(분야별 월 1회)</li> <li>▶ 전 수사관 현장 수사실무 교육(매월 1회)</li> </ul>
내 부 수 사 관 강 사 육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상 수사경력자 · 전문관 5명 내외, 교육TF 구성 · 운영</li> <li>※ 인권, 청렴, 우수 수사사례 교육(변호사, 자문검사, 전문관 활용)</li> </ul>

### □ 수사전문관 확대 및 인사교류 활성화 등으로 수사전문성 확보

- 변호사 우주의 전문수사관 대신 전·현직 경찰, 회계사 등 채용 : 5명 → 8명(+3)
  - (현재) 변호사(4), 경찰(1) → 경찰, 금감원 출신 등 경력직 채용
- 유관기관 인사교류 및 파견 활성화 : 2명 → 5명(+3)
  - 공정거래위 · 금감위, 검찰(서부지검, 남부지검 등), 식약처 등 확대
  - ※ 현) 교류기관 : 식약처 위해중앙수사단(1명), 환경부 중앙환경수사단(1명)

○ **수사전문관 확대 : 12명 → 25명(+13)**

- 기술직 위주의 전문관을 행정직군(행정·세무)으로 다변화
- ※ 전문관 지정 12명(보건 10, 전산 1, 환경1)

○ **전보 제한기간 확대 운영(2년→3년)**

- 상대적으로 짧은 행정직군 근무연한 강화 필요 (수사전문성·연속성 유지)
- ※ 평균 근무연한 : 기술직군 2년 11개월, 행정직군 1년 9개월

□ **신규 분야 민생침해 행위 수사에 탄력적 신속대응**

○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T/F) 발족·운영('18.1.18.~)**

※ **분양권 불법전매, 뒤편방,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수사**  
⇒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12명)구성, 상시 수사체제 가동
  - 범정부의 역점사업임을 감안 최고의 수사 인력 배치
- 행정공무원 위주의 부동산 투기단속 한계에 따른 수사관 추가
  - 시·구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 편성시 전담 수사관을 포함시켜 단속의 실효성 확보
- 자치구 자체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구성 권고

○ **시민안전 등 민생침해사범 발생시 신속 대응체계 마련**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공포 시행('17.12.19)

- 기존 : 55개 → 71개 법률(16개 추가, '18.1.18. 지명 완료)
- 특히,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시설물안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신규직무에 포함

- 최근, 사회문제화 된 시설물 안전, 의료법 위반 등 불법행위 수사
    -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불이행 등(시설물안전법), 당직의료인 미배치·무허가 의료인 고용 등(의료법)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사회복지시설(법인) 보조금 비리 등에 대한 수사
    - A구립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사건,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보조금 비리사건 등
- ⇒ 수사 인력을 증원하여 상시수사 가능 체제 유지

## 2

# 디지털 수사기반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강화

- ◆ 既 도입 시행 중인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시스템 활성화 추진
- ◆ 인공지능(AI) 활용, IT 신기술을 적용한 범죄정보 수집체계 구축

### □ 기존 시스템 보완 활성화 + IT 신기술 적극 도입

기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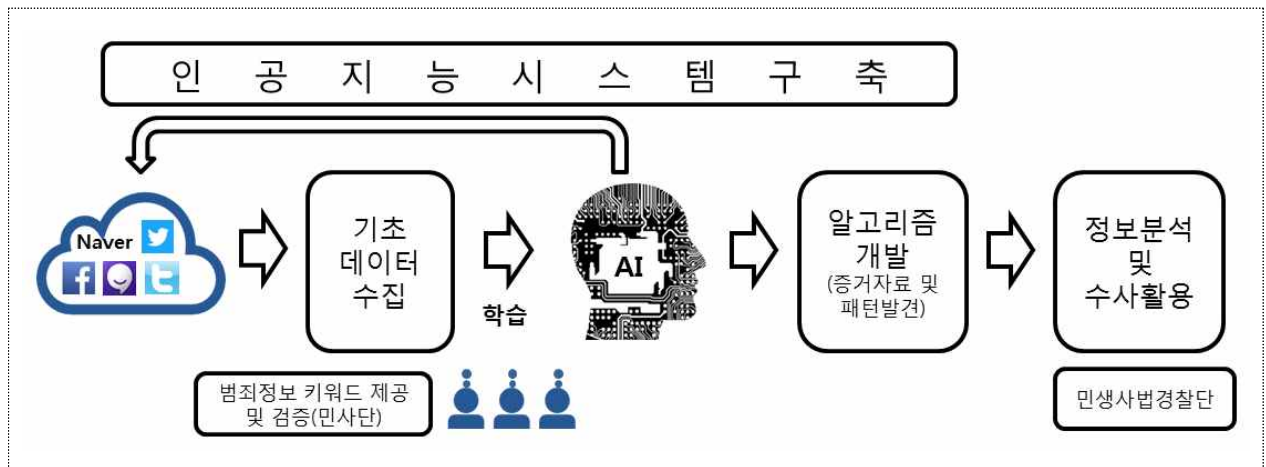
- ▶ 디지털포렌식 수사('17년) : 34회, 161매체 분석
- ▶ 대포킬러 프로그램 개발('17.8~12월) : 328건 전화번호 정지  
※ 성매매 전단지 게재 전화번호를 통화불능 상태로 조치, 통신사(22개)-서울시 협업 구축
- ▶ DNA분석기법 수사('16년) : 23억 새우젓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확  
대

- ▶ AI활용 '사이버수사 정보체계' 개발('18.하반기)
- ▶ '수사정보 포털시스템' 구축('18. 5월~)
- ▶ 방법용·교통·주차 CCTV 활용 강화('18.2월~)

### □ 인공지능(AI) 활용 '사이버수사 정보체계' 구축('18.하반기)

- 인터넷, SNS 등 사이버 상에 가짜 뉴스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전파되고 있는 민생침해 관련 범죄 정보를 색출하여 수사정보 활용
  - 불법대부, 다단계 등 민생사범 수사를 위한 사이버 범죄 정보 수집
  - AI의 분석데이터 학습을 통해 불법행위 정보 판단 알고리즘 개발
  - 수집된 민생침해 범죄정보는 수사정보로 활용



※ 정보기획관, 민생 위협정보 인공지능(AI) 구축사업 협업

수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사정보 포털시스템' 구축('18.5~10월)

○ (현재) 각종 수사관련 자료 수기 관리 ⇨ 전산화

○ 수사시작부터 종결(검찰송치), 사건관리 전산화로 수사투명성·업무효율성 제고

- 사건송치부 등 대장 DB화
- 사건별 필수 서류 기록보존
- 수사팀별·사건별 진행상황 모니터링
- 기록 수정·삭제 등 이력관리
- 각종 수사 통계자료 실시간 제공 등



○ 소요예산 : 220백만원(전산개발비 등)

방법용·교통·주차 CCTV 활용 강화('18.2월~)

○ (기존) 방법용 CCTV 위주(채증용) ⇨ (확대) 방법용/교통/주차 CCTV

디지털포렌식 수사 활성화

구 분	2017(도입 단계)	2018(활성화 단계)
직 무	◆ 불법대부업, 방문판매 분야 중점	◆ 부동산 투기사범 등 신규분야 ◆ 농산물·가공품 원산지 분야
기 관	◆ 민생사법경찰단	◆ 유관기관, 자치구 지원

※ 디지털포렌식이란?

각종 디지털 정보(PC, 모바일)를 식별하고, 분석을 통해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특정하여 보존하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여, 언제든지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증거력을 확보하는 기법



'대포킬러' 운영 활성화 : 길거리 성매매 전단지 제로화 추진

- 성매매 전단지 수거 자원봉사자(118명) 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 선정 표창 및 간담회 개최
-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개설자(대포폰) 수사, 홍보강화

### 3

## 수사 거버넌스 확대로 민생범죄 사전예방

- ◆ 마을에서 활동하는 일반시민 참여, 생활주변 민생범죄 촘촘히 해결
- ◆ 수사직무별 다양한 기관, 단체 등과 협치 수사시스템 구축·운영

### □ 민생범죄 제보활동을 위한 '서울 민생파수꾼' 구성·운영('18.3월)

#### ○ 생활주변 불법행위 제보 활성화로 민생안전 서울 기여

-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 행위 등 제보활성화
-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 정보제공 등

#### ⇒ 민생범죄신고 앱 등 시민제보시스템 활성화



#### ○ 운영규모 : 200여명

- 성매매 전단지 수거 자원봉사자(기준) → 제보 분야 확대
- 자치구 및 직무연관 부서로부터 추천받아 모집, 교육

#### ○ 우수 파수꾼 주기적 격려, 신고포상금 지급 확행

### □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계 유지 강화



- 서울YWCA
- 한국소비자연맹

+



- 금융감독원
- 한국소비자원
- 특허청, 관세청
- 한국석유관리원 등

+



- 자동차검사정비조합
- 한국대부업금융협회

#### ○ 시민단체 활용, 신고·제보접수 및 합동점검

#### ○ 유관기관별 업무협약 체결 범죄피해 예방 활동 전개

- '서울시-한국대부업협회-카카오' 공동협약 체결 추진 ⇒ 불법 대부광고 차단
- 공조수사·단속, 수사장비 공유, 제도개선 추진 등

※ (기존) 식약처와 MOU('17.4.), 통신3사와 MOU('13.8.)

### □ 자치구 특사경 조직 신설 및 시·구간 수사협업체계 구축

#### ○ 자치구 '민생수사전담팀' 신설(자치구별 1개팀)로 자치경찰 토대 마련

#### ○ 시 파견중인 자치구 직원(43명) 복귀시 '민생수사전담팀'으로 배치 유도 등

- ◆ 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을 수사과정에서 최우선 가치로 중시
- ◆ 인권존중 수사 환경 구축 및 인권의식 함양으로 인권보호 강화

### □ 추진 방향

- ☑ 인권침해 발생 **사전예방** 노력 강화
- ☑ 인권침해시 **사후구제** 확행
- ☑ 인권보호 **시스템 제도화**

인 권 중 심  
특별사법경찰상  
정 립

### □ 인권교육 활성화, 외부 인권프로그램 공유로 인권침해 사전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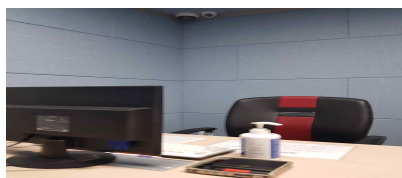
- **인권교육 프로그램 정기적 운영** : 분기1회, 인권활동가 등 전문강사 초빙
  - 형식적 반복적 교육 아닌 실천적 인권교육 시행 및 교육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 제시 및 활용, 인권침해 예방방안 수사관 토론 등
    - ▶ 연 2회 이상 의무 참석, 교육일시 사전 공지로 미 참여자 최소화
- 남영동 대공분실 등 경찰청 인권센터 견학 추진('18. 2~3월)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 홍보자료 적극 활용(인권영화, 비디오 등)

### □ 인권침해 발생시 사후구제 강화

- 형사보상 제도 안내(무죄판결시 최저임금액의 5배), 해피콜 운영 등
  - 신청방법(전화, 응답소, 우편 등), 구제절차, 구제내용 등
- 인권침해 신고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즉각 조사 조치

### □ 조사실 영상녹화시스템 활성화 및 인권친화 수사환경 조성

- 조사 개시전 영상녹화 가능 사전 안내 의무화 → 본인 요청시 녹화
- 특히, 여성·노약자·외국인·장애인 등 대형조사실 활용 등
  - 대형조사실(남산별관 1층, 2개소, 개소당 면적 19㎡), 친족 등 보호자 조사과정 참여



《 영상녹화 시스템 》



《 1층 마련 대형조사실 》

## □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정·운영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정, 시행 : '18. 3월

### 《 ‘인권보호 수사준칙’ 주요 내용 》

#### ▶ 수사관 인권보호의 책무 마련

- \* 사건관계인의 인권 존중의무, 적법절차 준수로 사법정의 실현
- \*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안내 등
- \* (가혹행위 등의 금지) 어떠한 경우든 사건관계인에 고문 등 금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의 증거 사용 금지
- \* (차별의 금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 (공정한 수사) 권한의 자의적 행사 및 남용 금지, 친족친분이 있는 경우 사건 재배당 등
- \* (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 및 명예·신용 훼손 방지 노력
- \* (임의수사 원칙) 원칙적으로 임의수사 활용, 강제수사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화

#### ▶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 \* 체포·구속의 최소화, 구속수사의 기준 마련,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 ▶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 \*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수사관 인권교육 수시실시 등

○ 실질적 인권준수 실천방안 마련 시행으로 수사관 인권의식 확산

-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권수사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여성일 경우, 여성수사관 반드시 참여 등
- 조사종료 피의자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
- 준칙위반 직원 징계 및 인사조치, 특별교육 확행
  -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처분기준에 의거 엄정 조치
- 특사경 운영 소방재난본부 등 시 유관부서, 자치구 특사경 공동 활용 < 특사경 인력 : 총 787명(시485명, 구302명) >
- 전국 지자체 및 국가기관 특사경에 전파로 효과 제고





## IV. 수사분야별 추진계획

---

1.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수사
2. 취업난 악용 서민 울리는 불법 다단계 수사
3. 위조·원산지표시위반 상품 유통근절로 시민안전 확보
4. 유해성 있는 불법오염행위 수사로 쾌적한 환경보전
5. 보건·의료범죄 집중수사로 시민안전 및 건강보호
6. 기본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관례적 부정식품 유통사범 척결
7. 그린벨트훼손, 유해매체물 배포 등 시민생활불편행위 수사강화

# 1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수사

- ◆ 서민과 취약계층 상대로 법정 이자율(연 24%) 초과하는 고금리 수취,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불법추심 행위 등 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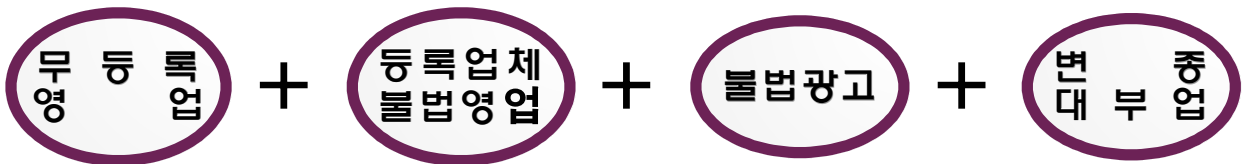
※ 대부업 이자율 인하 : 27.9% → 24.0%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18.2.8. 시행)

### □ 현황 및 실적

- 지명일 : '15. 8. 26.(팀 신설 : '15. 11월)
- 근거법령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업체현황 : 등록업체 약 2,900개 (※ 무등록 8,800여개 추정)
- 2017년 주요 추진실적 : 총 42건, 67명 형사입건(2명 구속)
  - 등록·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및 불법 광고 행위자 : 40개소 64명 입건
  - 지방세 카드대납 등 변종 대부업소 : 2개소 3명 입건

### □ 추진계획

- 등록·무등록 대부업체 불법 영업행위 등 집중 기획수사(연중)



- 등록업체 가장 명의 도용, 고금리 수취 등 불법 대부업자 적극 수사(연중)
- 대부중개업체 불법행위 근절, 유관기관 합동 기획 수사(반기1회)
- 카드깡, 휴대폰깡 등 변종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활동 강화(연중)
  - 무가지신문, 도로·전신주 부착 전단지 광고 집중 수거 ⇨ 불법행위 추적
  - 역세권, 떡자골목, 화상경마장 주변 등 탐문(야간, 주말, 출근시간 등)
-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지능적 불법 대부업자 중점수사(연중)
  - 온라인 대출중개사이트 광고업체 추적 및 불법행위 상시 모니터링
  - 중개사이트 회원가입 후 불법행위 등 적발(모니터링 결과 적극 활용)

## 2

## 취업난 악용 서민 올리는 불법 다단계 수사

- ◆ 경기둔화와 구직난 장기화에 따른 취업 미끼 불법 다단계 척결
- ◆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상조업체 위법 행위 적발로 경제적 약자 보호

### □ 현황 및 실적

- 지명일 : '15. 8. 26. (팀 신설 : '15. 11월)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업체현황 : 7,263개소(다단계·방문판매 7,190 / 상조업 73)
- 2017년 추진실적 : 총 31건, 63명 형사입건
  - 청년층 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 및 무등록 다단계판매 : 19건 39명
  -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불법상조업체 : 12건 24명

### □ 추진계획

- 취업난 악용 구직자 대상 불법 다단계업체 중점 수사(연중)
  - 취업 준비생 대상 조직적·상습적 불법 다단계업체
  - 중장년, 구직자 대상 판매원 모집 강요 등 무등록 다단계업체 등
- 신종 다단계 불법 행위 수사 강화('18. 4.~)
  - 가상화폐, 신기술 등 투자를 빙자한 신종 다단계 행위
  - 온라인 정보 수집, 디지털 증거 자료 분석 등 수사기법 확대로 신종 범죄 신속 대응
-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위법 행위 수사(연중)
  -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 위반 집중 수사



### 3

## 위조·원산지표시위반 상품 유통근절로 시민안전 확보

- ◆ 중국산 부품, 자재 등의 사용으로 시민안전 저해 '원산지표시위반' 행위 수사
- ◆ 유해물질 사용 상표도용 장난감으로 어린이 건강 위협하는 '짜퉁상품' 판매수사

### □ 현황 및 실적

- 지명일 : '12.4.18.(상표), '16.7.28.(대외무역)
- 근거법령 : 상표법, 대외무역법
- 업체현황 : 32,502개소(동대문/남대문 29,291, 명동/이태원 3,211)
- 2017년 주요 추진실적 : 총 204건, 205명 형사입건
  - 비밀창고 운영, 외국인 대상 짜퉁판매(660여점) 사범 2명 입건
  - 아동짜퉁의류 제조유통사범 5명 입건(3만여점) 압수·폐기
  - 온라인쇼핑몰 상표법 위반사범 5명 입건
  -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일명 '라벨갈이') 사범 7명 입건 등



### □ 추진계획

-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일명 '라벨갈이') 집중 수사(연중)
  - 외국산 의류의 국산 둔갑으로 국내 소상공인 피해 심각
  - 국내 산업 적극 보호 및 종사자 일자리 활성화 추진 필요
- 시사성·시기성을 고려한 시민공감형 기획수사('18.2~8)
  - 장난감·아동의류, 바캉스·스포츠 용품 위조상품 수사
-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수사(연중)
  - SNS를 통해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 온라인수사 전담반 구성
- 범죄 취약시간대 집중단속 및 유통경로 차단수사(연중)
  - 동대문·남대문시장 등 야간 도매시장 현장수사 강화
  - 제조공장 및 공급자 색출로 위조상품 유통경로 차단수사 강화

## 4

# 유해성 있는 불법오염행위 수사로 쾌적한 환경보전

- ◆ 시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오염원 관리로 환경오염 사각지대 수사 강화
- ◆ 가짜 석유류 불법유통 및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 수사로 시민안전 확보

### □ 현황 및 실적

- 지 명 일 : '08.2.21.(환경 32개), '15.8.26.(석유,자동차), '18.1.18.(환경 7개)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42개 법률
- 업체현황 : 38,010개소 (단위 : 개소)

구분	대 기 수 질	폐 기 물	자 동 차 정 비 업 소	석유판매업	
총 계	3,805	6,742	22,792	3,832	839

- 2017년 주요 추진실적 : 총 256건, 355명 형사입건
  -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수사 : 59건 126명
  - 대기 정화시설 없이 주택가, 도로변 자동차 불법도장 등 : 120건 132명 (1명 구속)
  - 석유제품 부정유류 자동차연료 판매, 이동판매 규정위반 등 : 20건 23명

### □ 추진계획

- 가짜 석유류 및 이동 불법판매 행위 기획수사(연중)
  - 대형버스·트럭의 경유+등유혼합 가짜석유 유통, 5kl 초과 이동판매 행위 등
- 고질, 상습적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 상시수사(연중)
  - 불법도장시설 설치·조업, 허가사업장 외부도장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조치 등 미세먼지 배출원 수사('18. 3~5)
  - 철거, 터파기 공사 먼지발생이 많은 공사 초기공정 중점
  - 야적, 실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여부
- 자동차 휠 관련업체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사('18. 3~6)
  - 휠 광택·내마모성·색상유지 위한 도장, 도금, 세척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 폐기물 유해성 차단을 위한 배출 및 처리실태 집중 수사('18. 6~12)
  - 재활용하는 것으로 위탁받은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 유해성 있는 의료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과정에서 위법행위

- ◆ 무자격 의료행위 기획수사 및 다중이용시설인 공중위생업소 수사활동 강화
- ◆ 불법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유통 차단 및 허위과대광고 중점 단속

### 현황 및 실적

- 지명일 : '08.2.21.(의약,공중위생), '15.8.26.(화장품,의료기기), '18.1.18.(의료)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화장품법, 의료기기관리법, 의료법
- 업체현황 : 총 65,985개소
  - 의약업소 6,549, 공중위생업소 39,521, 화장품 3,548, 의료기기 16,367
- 2017 주요 추진실적 : 총 188건, 259명 형사입건(1명 구속)
  - 서울시·식품의약품 안전처, 공조수사를 위한 MOU 협약 체결
  - 불법 다이어트 식품 제조 판매사범 기획 수사 : 6명 형사입건
  - 오피스텔, 고시원 등 관광객 대상 신종범죄 숙박영업 특별수사 : 12명 입건
  - 불법미용 시술한 무자격자 및 대형프랜차이즈 피부미용업소 적발 : 24명(1명구속)
  - 식품첨가물 등 의료용 소독제 재료 판매업자 적발 : 8명 형사입건

### 추진계획

- 무자격 의료행위 및 사무장 병원 등 기획 수사(연중)
- 대형 숙박업소·목욕탕(찜질방) 등 불법 영업행위, 위생실태 기획수사('18.4)
- 부정·불량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판매사범 수사('18.5~8)
- 무자격자 의료기기 불법 사용행위 및 공급책 수사(연중)
-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18.10~11)
- '의료법' 직무범위 추가('18.1.18.)에 따른 불법의료행위 기획수사(연중)

## 6

# 기본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관례적 부정식품 유통사범 척결

- ◆ 시민 다소비 식품 등 기본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을 통한 관례적 부정식품 제조·유통사범 집중 수사

### □ 현황 및 실적

○ 지명일 : '08. 2. 21.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

○ 업체현황 : 211,781개소

(단위 : 개소)

구분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총계	211,781	159,431	2,186	12,744	25,676	466	11,278

○ 2017년 주요 추진실적 : 총 653건, 686명 형사입건

- 다소비식품(젓갈류) 원산지 위법행위 수사 : 10명 입건
- 불법 도축 및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위법행위 수사 : 23명 입건
- 위해식품(과자류) 제조·유통업체 수사 : 29명 입건
- 여름철 다소비식품(콩국, 식혜) 제조·유통업체 수사 : 39명 입건
-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수사 : 1명 입건

### □ 추진계획

- 수입·건강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사범 수사(연중)
- 부정축산물 유통사범 수사('18. 1 ~ 3, '18. 8 ~ 10)
- 어르신 대상 가짜 건강식품(홍삼류 등) 제조사범 수사('18. 1 ~ 5)
- 여름철 식중독 대비 즉석식품류 수사('18. 4 ~ 7)
- 꿀 등 가짜 건강식품 제조·유통사범 수사('18. 6 ~ 9)
- 김장철, 부정식자재 유통사범 수사('18. 8 ~ 11)

# 7

## 그린벨트훼손, 유해매체물 배포 등 시민생활불편행위 수사강화

- ◆ 시민휴식처 침해하는 그린벨트 위법행위(산림훼손, 계곡점유 등) 엄정 수사
- ◆ 유해매체물(성매매 전단지) 적극 대처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 현황 및 실적

○ 지명일 : '10.11.22.(개발제한구역), '08.5.27.(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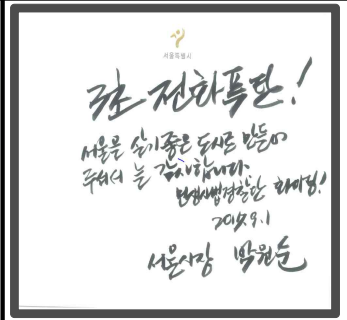
#### ○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 분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청소년 분야 : 청소년보호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2017년 주요실적 : 총 49명 형사입건

- 성매매 전단지 '살포자 검거'에서 '불법영업 차단'으로 근원적 대책 전환 성과
  - ▶ 대포킬러 프로그램 개발 유해매체물(선정성 전단지) 전화번호 정지 : 328건
  - ▶ 전화번호 통신정지 소요기간 대폭 단축 : 기존 5~7일 ⇒ **1~2일로 단축**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통화차단(대포킬러)
 <p>불법 자릿세 받는 '계곡 맛집'</p>	 <p>서울시 통신서버</p>



### □ 추진계획

- 개발제한구역 내 취약지역 악용한 위법행위 중점 수사(연중)
  - 산림훼손 행위, 행락철 계곡주변 무단점령 영업행위 등
- 선정성 유해매체물(성매매 전단지) 통화차단으로 제로화 추진(연중)
  - 전화번호 개설자 내사로 대포폰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유관기관·시민단체 합동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및 담배) 판매 단속(연중)



별첨

# 201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 □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6	19	7		
	시정· 처리요구사항	20	16	4		
	건의사항	5	2	3		
	기타(자료제출 등)	1	1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생사법경찰단의 근무선호도 낮은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전문직위 25개(현원 대비 41.7%) 지정 완료('17.8월 기준)</li> <li>- '17년 전문관 6명 추가 선발하여 총 12명('18.1월 현재)</li> <li>○ '17년 시장 표창,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로 수사관 사기진작</li> <li>- 시장 표창 : 총 27명 수여, 해외연수 : 총 11명 기회제공</li> <li>○ 직원(남·여) 휴게실 마련 및 헬스장 정비 등 근무환경 및 여건개선으로 근무의욕 고취('17)</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에 관심 있는 민생사법경찰단 근무 희망직원 모집 ('18년 반기별, 시·구 업무계시관 홍보 추진)</li> <li>○ 전문관 확대(현재 12명→확대 25명) 및 시장 표창, 해외연수 기회제공 등 우수 수사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지속 마련</li> <li>○ 수사비용 현실화를 위한 '수사활동비' 신설을 市 기획조정실, 타 광역 시도와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li> </ul>
<p>○ 현장 근무 경험이 많지 않고 나이가 어린 변호사(6급)를 외부 채용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의 조직문화를 해치고 기존 근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사법경찰단 신설에 따른 사법경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범죄수사·사건 소송수행 등 수사법률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변호사를 채용함(행정6급, 4명)</li> <li>※ 변호사 경력직 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한 것으로 나이·성별 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음</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수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위주의 법률전문가 대신 전·현직 경찰, 회계사 및 금융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경력자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바, 기존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음</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수사관들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충분히 갖추기 바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신용 보호장비 구비(5종/68점) 후 필요시 사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신용스프레이, 삼단봉, 방검복, 수갑, 포승줄</li> </ul> </li> <li>○ '17.12월 전 수사관 대상 필요장비 수요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조사 결과, 추가적인 보호장비 요청은 없었음</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관 대상 보호장비 수요조사 수시 실시 후 신속 구매 지급</li> </ul>
<p>○ 민생사법경찰단 직원의 근무 기간을 살펴보니, 1년 미만 20명, 1~2년이 22명으로 전체 직원 중 2/3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임.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근무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희망근무가 많아지도록 근무환경과 여건을 개선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보직기간 확대기관 지정 요청'(17.11, 인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보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운영</li> </ul> </li> <li>○ 수사 전문직위 25개(현원 대비 41.7%) 지정 완료(17.8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전문관 6명 추가 선발하여 총 12명('18.1월 현재)</li> </ul> </li> <li>○ 자치구 과견직원의 잦은 인력교체(연45%)에 따른 市 정원 확대 추진 : 시 정원 증원('18.1월) 56명→63명(+7)</li> <li>○ 직원(남·여) 휴게실 마련 및 헬스장 정비 등 근무환경 및 여건개선으로 근무의욕 고취('17)</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보직기간 확대기관 지정' 지속 협의(인사과)</li> <li>○ 수사 전문관 지속 선발 및 확대 추진(12명→25명)</li> <li>○ 수사에 관심 있는 민생사법경찰단 근무 희망직원 모집 ('18년 반기별, 시·구 업무게시판 홍보 추진)</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성매매 전단지 살포를 무의미하게 만든 '대포킬러 프로그램'이 단순히 일회성 전단지 살포 중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파급효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 성과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할 것. (민생수사2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업자와 통화불능 유도 '대포킬러' 프로그램 개발('17.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별 자원봉사자(118명) 및 수사관이 수거한 성매매 전단지에 게재된 전화번호로 3초 간격으로 성매매 영업이 불법이라는 안내멘트를 발신하는 '대포킬러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매매업자와 성매수자간 통화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효과</li> </ul> </li> <li>○ 운영성과 : 성매매전단지 328건 전화번호 정지 조치('17년말)</li> <li>○ '대포킬러' 프로그램 횡단전개 : 불법 대부업 전단지에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17.10.10. ~ 계속)</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번호 개설자에 대한 내사로 대포폰 발생 예방 추진</li> <li>○ 취약지역 자원봉사자 활동 강화, 우수봉사자 시상 격려</li> </ul>
<p>○ 성과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련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를 평가주기(반기별)에 맞게 목표를 설정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평가주기 및 목표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디지털 수사지원 건수) 평가주기 및 목표치 조정 (변경전 : 연간, 변경후 : 반기별)</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행 : '18. 3월 ~</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생사법경찰단 운영과 관련 수사관 인력만으로는 범죄를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하철 광고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중</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결과 등에 대한 수사 보도자료 제공 : 총 43건('17)</li> <li>○ '페이스북' 자체 개설 운영('17.2.) 등 온라인 홍보 집중</li> <li>○ 뉴딜일자리 활용 카드 뉴스 제작 및 홍보</li> <li>○ 홈페이지 및 신고·제보센터 개설 운영('17.2.)</li> <li>○ '서울시 스마트 불편신고' 앱 구축·운영('17.5.)</li> <li>○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마련 시행('17.9.) 등</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구축한 민생신고 앱 등 범죄신고·제보시스템을 통한 시민신고 활성화 추진 강화</li> <li>○ '18년 홍보비 예산(50백만원) 적극 활용, 홍보 콘텐츠 개발</li> <li>○ 민생범죄 제보활동을 위한 '서울 민생피수꾼' 구성·운영('18.3월)</li> <li>○ 유관기관 등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홍보 활성화 추진 - (대상) '자동차검사정비조합' '한국석유관리원' 등</li> </ul>
<p>○ 민생사법경찰단은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조직이므로 비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민생사법경찰단 전 직원 참여 자체 청렴교육 실시 ('17년 7회)</li> <li>○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기강확립 관리방안 마련시행'('17.3.28)</li> <li>○ '민생사법경찰단 특별 공직기강 확립대책수립'('17.8.17) 등</li> <li>※ 감사담당관 주관 공직기강확립추진실적 평가 장려기관 선정 ('17.12.13.)</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렴 활동 강화 직원 교육 지속 추진</li> <li>○ '18년 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시행 : '18. 2월~</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전문관 확대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전문직위 25개(현원 대비 41.7%) 지정 완료('17.8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전문관 6명 추가 선발하여 총 12명('18.1월 현재)</li> </ul> </li> <li>○ '필수보직기간 확대기관 지정 요청'('17.11, 인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보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운영</li> </ul> </li> <li>○ 市 정원 증원('18.1월) : 56명 → 63명(+7)</li> <li>○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17.10월)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연말기준) : '18년(75명)→'19년(100명)→'20년(110명)</li> </ul> </li> <li>○ 수사전문가 채용('16) : 변호사(4명), 검·경 출신(1명)</li> <li>○ 교류중(2명) : 식약처 위해중앙수사단, 환경부 중앙환경수사단</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전문관 지속 선발 및 확대 : 12명('18.1.현재)→25명</li> <li>○ '필수보직기간 확대기관 지정' 지속 협의(인사과)</li> <li>○ 변호사 위주에서 경찰, 회계사 등 채용 : 5명→ 8명(+3)</li> <li>○ 유관기관 인사교류 및 파견 활성화 : 2명→ 5명(+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금감위, 검찰, 식약처 등 확대</li> </ul> </li> <li>○ 시 인력 및 조직 유관부서(인사과, 조직과)와 협의하여 수사인력 확대 적극 추진</li> </ul>
<p>○ 자치구에서 파견온 직원들이 열정, 집념, 진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함.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실적 우수 자치구 파견직원 市 전입 : '18.1월(1명. 기계8)</li> <li>○ 시장 표창 대상자 선정시 자치구 직원 우선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시장 표창 인원 : 총 27명(시 7, 자치구 20)</li> </ul> </li> <li>○ '18년 우리단 주요사업 내용으로 시·구간 수사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구별 '민생수사전담팀'(특사경 조직) 신설 추진</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파견직원 시장 표창, 해외연수 기회 지속 제공</li> <li>○ 자치구별 '민생수사전담팀' 신설 완료 이후에는 자치구 파견직원 복귀 시에 해당 자치구에 전담팀 우선 배치를 유도하여 원활한 시·구간 수사협업체계 구축 예정</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업무보고와 관련 수사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차후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범죄 예방 위한 기획수사 강화 : 목표 30건 이상('17)</li> <li>- '17년 기획수사 발표 34건으로 목표 초과달성</li> <li>○ 송치율 목표 : 목표 89.7%→달성 91.4%</li> <li>○ 디지털포렌식 수사 목표 : 목표 12건→달성 13건</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분야별로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li> </ul>
<p>○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각종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회와 함께 민생사법경찰단 운영에 따른 통합 조례 등을 만들 필요성이 있음. 조속한 추진 바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중</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관련 자체적 인권보호 방침 등 제정 운영</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관 후생복지, 인권 수사 등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협의 추진하겠음</li> </ul>
<p>○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방검복, 수갑, 포승줄 등 각종 수사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운용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중</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장비 사용 법적근거 마련 요청(대검찰청, '16.10.25)</li> <li>○ 영상녹화 시스템 장비활용에 관한 매뉴얼 제작('17.3.22.)</li> <li>- 영상녹화 조사 절차·방법, 영상녹화물 생성 및 처리 방법 등</li> <li>○ 대검찰청 주최 전국 특사경 운영책임자 워크숍 참석 건의('17.9.22)</li> <li>- 안전한 수사활동을 위한 특사경 장구사용 근거 마련 필요</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검찰청 지속 건의·협의 및 자체 규정 마련 추진</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자치구별 수사분야 실적 편차가 크므로 자치구의 협조 및 유기적 협력 강화 방안 마련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포 등 수사분야별로 자치구별 특수성이 있어 자치구별로 입건건수에 편차가 있음</li> <li>○ 환경, 식품 등 수사분야별 시-구 합동 단속 추진</li> <li>○ 전국 최초 통신프로그램(대포킬러) 개발 자치구 협업으로 성매매 전단지 수거체계 구축 운영 : '17.8.~</li> <li>○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수사를 위한 시·구 특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일자 : '18.1.19.(금)</li> <li>- 교육대상 : 총 123명(시 82명, 구 35명, 국토부 6명)</li> <li>- 교육내용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위한 특사경 지명 요청 안내 및 수사기법 교육 등</li> </ul> </li> <li>○ '18.1월(1.22~1.31, 8일간) 수사기법 교육 등을 위한 市 민생사법경찰단 기본 직무교육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직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시 : 97명 교육이수, 자치구 11명 교육이수 각각 완료</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의견수렴('18.3월) 후 유기적 협조 체계 추진</li> <li>○ 수사분야별 시-구 공조수사 강화, 공동 교육 지속 추진, 자치구 요청시 수사인력 및 각종 수사장비 지원 예정</li> </ul>
<p>○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12월에 집중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예산 편성시 필요한 수사 장비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적기적소에 집행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수사장비(압수용 냉동고)예산 상반기 집행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5,000천원→집행 4,670원('17.5월)</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장비 예산 적시 집행으로 효율적인 수사활동 지원</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생사법경찰단 수당 반납과 관련 반납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민생 사법경찰단의 특수성을 생각 해서 더 이상의 부당수령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수당에 관한 철저한 관리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 기준에 따라 선 지급한 수당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인사 발령 등 변동에 따른 정산으로 환수금액 발생</li> <li>○ 수당지급 관련규정 전 직원 공유 및 급여 담당 교육 강화</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납 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산 실시</li> <li>○ 부당수령 방지 교육 및 지급내역 정기 모니터링</li> </ul>
<p>○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시정 여론 조사 방식을 온라인 여론 조사 보다는 정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으로 시민 의견을 파악하도록 보완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한 여론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 : '17.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뢰기관 : (사)한국정책학회('17.9.1~9.30)</li> <li>- 조사대상 : 총1,021명(시민 531명, 국가경찰 346명, 제주자치경찰 100명, 교수 등 전문가 44명)</li> <li>- 조사방법 : 객관식 자기기입식 설문조사</li> </ul> </li> <li>○ 설문조사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응답자의 70.6% 자치경찰 도입 찬성</li> <li>- 전체 응답자의 78.1%가 자치경찰제 시행시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응답 등</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경찰 용역결과 발표 완료('18.2.6)</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자치경찰시민회의(TF)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지역의 인물이 과다 참여함으로써 구성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였음. 보완하기 바람. 특히, 2017년도 예산에 미반영 되었음에도, 특정 예산에서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 하므로 개선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공약사업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포함되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산변경을 실시함</li> <li>○ 자치경찰시민회의는 관련연구 교수, 주민단체, 전문가 등 총 22명으로 구성('17.8.31. 출범).</li> <li>○ 위원 구성시 자치경찰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경찰행정학과·법학과 등 교수진이 10명 포함됨</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경찰 용역결과 발표 완료('18.2.6)</li> </ul>
<p>○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포괄 예산에서 지원 받아 집행했음에도 의회에 미보고 하였음. 주의가 필요함.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사법경찰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특사경 발전방안 및 자치경찰제 모델 구상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17.8~)</li> <li>-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4천만원)받아 집행(약32,272천원)</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업무처리시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음</li> </ul>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불법 다단계 등 방문 판매 수사와 관련하여, 정보 입수가 시민 제보에만 의존하고, 수사 정보 수집에 미흡한 점이 많음. 또한, 바르게 살기 추진위원회 등 자치구와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중</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분야별 민간협의체, 유관기관 참여 공조수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협약 체결('17.4.19) 공조수사</li> <li>-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과 가짜 석유 등 공조수사</li> <li>-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등 검사의뢰</li> </ul> </li> <li>○ 성매매업자와 통화불능 유도하는 '대포킬러' 운영('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자치구(20), 이동통신사(KT, LG U+, SK텔레콤)</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범죄 제보활동을 위한 '서울 민생피수꾼' 구성·운영('18.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전단지 수거 자원봉사자(기존) → 제보 분야 확대추진</li> </ul> </li> <li>○ 시민단체, 민간협의체 등과 수사거버넌스 구축('18.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YWCA 등 시민단체 활용, 신고·제보접수 활성화 추진</li> <li>- '서울시-한국대부업협회-카카오' 공동협약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범죄피해 사전예방활동 전개</li> </ul> </li> </ul>

#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원활한 범죄정보 수집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신고에 참여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신고 시스템 간편화 및 신고체계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17. 2월~) 및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17. 5월~) 운영</li> <li>- 민생사법경찰단 페이스북 운영 및 신고방안 홍보 카드뉴스 게재('17.2월~)</li> </ul> </li> <li>○ 민생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17.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다단계신고자 포상금 550만원 첫 지급('17.9월)</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결과 언론보도 등 통해 민사단 시민 인지도 제고</li> <li>○ 홈페이지, 앱, SNS 운영 강화로 시민 신고 활성화</li> </ul>
<p>○ 최근의 범죄는 인터넷상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방향도 사이버범죄 및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SNS 등 사이버 상에 표출된 범죄정보 수집 활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불법대부, 고리대금,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대상 집중</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AI) 활용 '사이버수사 정보체계' 구축('18.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SNS 등 사이버 상에 가짜 뉴스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전파되고 있는 민생침해 관련 범죄 정보를 색출하여 수사정보 활용</li> </ul> </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p>○ 특사경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필수보직기간 확대 및 전문관 운영 인력 확대가 필요하며 경찰·소방·교육공무원처럼 특화할 필요가 있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보직기간 확대기관 지정요청’ 공문시행(’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보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운영</li> </ul> </li> <li>○ 수사 전문직위 25개(현원 대비 41.7%) 지정 완료(’17.8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전문관 6명 추가 선발하여 총 12명(’18.1월 현재)</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보직기간 확대기관 지정’ 지속 협의(인사과)</li> <li>○ 수사 전문관 지속 선발 및 확대(’18.1.현재 12명→25명)</li> </ul>
<p>○ 건축물 신축 준공검사 후에 불법 증축하고 임대하는 사례 등이 횡행하는데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경 도입 필요성 등 직무범위 확대 방안 적극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을 추가하는 개정안 발의(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17.11.20.)</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li> </ul>
<p>○ 청소년성매매 전단지 불법 영업 차단과 관련 계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터넷상 도박까지도 직무범위 확대하면 좋겠음.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청소년 인터넷도박이나 사이버범죄 관련 분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명을 받기 위해 노력바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관련 법률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경 제도는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임</li> <li>- 도박죄, 사이버범죄를 특사경 직무범위에 포함할 수 있을지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 법률검토 실시</li> </ul>

#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자치경찰 학술용역 중간보고서 및 용역 관련 예산 자료 (민생수사1반)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학술용역 보고서 발간·납본 즉시 최종보고서 및 예산 재배정 내역 제출('18. 2월중)